

신현송, 중립금리·금리동결·추경·환율 ‘조건부 대응’ 기조

오늘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

초기 ‘실용적 패파’ 이미지와 달리 서면답변 “물가만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환율 변동성 확대·파급경고 중시 개인 자산·인사 검증 등 검증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4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고환율과 중동발 유가 불안, 성장 둔화 우려가 한꺼번에 겹친 국면에서 무엇을 먼저 보고 어떤 조건에서 움직일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재정경제기회위원회(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지난 3월22일 지명 직후 시장 일각에선 신 후보자에게 ‘실용적 패파’ 이미지를 먼저 덧씌웠다. 대통령실이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 권위자라고 평가한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 경력 자체가 물가와 환율, 금융불균형에 더 민감한 통화정책을 예고하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문회 직전까지 후보자 본인

이 내놓은 메시지는 단순한 긴축 선호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지명 직후부터 물가·성장·금융안정을 함께 보겠다고 했고, 지난 3월 31일 첫 출근길에서도 매파·비둘기과 이분법보다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최근 서면답변에선 현 기준금리(연 2.50%)를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로 평가했고, 최근 금리 동결도 적절했다고 밝혔다.

◆ 금리 판단 기준이 첫 번째 검증대

청문회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금리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신 후보자의 메시지는 지명 직후의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 이미지와 달리 중립금리 인식, 금리 동결 평가, 추경 효과 판단, 환율 대응 원칙 모두에서 한쪽으로 기운 성향론보다 조건부 대응에 가까웠다. 신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통화정책

은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금융안정과 성장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만 기계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론적으로는 일시적 공급 충격에 통화정책 대응이 불필요할 수 있지만, 충격이 장기간 지속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 후보자의 발언은 청문회의 질문이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느냐, 내릴 생각이 있느냐”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뜻이기도 하다. 환율과 유가가 물가를 밀어 올리는 동시에 성장 하방 압력도 커질 때 어떤 지표 조합을 가장 중시하고, 어느 시점에 정책 판단을 바꿀 것인지가 진짜 검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추경에 대해 신 후보자는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 올릴 수 있지만 물가 자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 환율·외화자산, 두 번째 검증대

두 번째 축은 환율 인식과 정책 신뢰다. 신 후보자는 최근 서면답변에서 “과도한 환율 상승에는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통해 소비자물가를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외환보유액과 달러 유동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환율 레벨 자체보다 변동성 확대와 그 파급경로를 더 중시하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대목은 신 후보자 개인의 외화자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민감해졌다. 신 후보자는 외화자산 정리 계획과 관련해 상장지수펀드(ETF)와 영구 국채 등 총 18억9000만달러를 이미 매각했고, 다른 해외자산도 순차적으로 매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 오피스텔과 미국 아파트도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회가 인사 검증 쪽으로 넓어진 것도 변수다. 현재 정치권에선 신 후보자의 가족 국적 문제와 다주택 보유, 모친 아파트 매입 과정을 둘러싼 ‘갭투자’ 및 무상거주 논란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 미이행 문제는 곧 정리하겠다”며 “배우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美, 韓 열연강판에 상계관세 예비 판정... 철강업계 ‘부담’

포스코 3.71%, 현대제철 1.28%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 쟁점으로 작용 매년 세율 변동... 실적 영향엔 제한적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결과를 내놓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관세와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3년 한국에서 생산·수출된 특정 열연강판 제품에 상계관세 대상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 예비 산정된 순상계관세율은 포스코 3.71%(2022년분 대비 +2.24%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다.

미국의 한국산 열연강판 상계관세는 지난 2016년 10월 도입된 뒤 매년 행정재심을 거쳐 관세율이 재산정되고 있다. 보조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따라 같은 기업도 연도별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열연강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연연강판 행정재심 예비 결과에서도 포스코 3.67%(2022년분 대비 +2.20%포인트),

현대제철 1.28%(-0.93%포인트)의 상계관세율을 산정했다. CTL 강판의 경우 2023년 수입분 기준 동국제강 2.21%(2022년분 대비 +0.20%포인트), 현대제철 1.31%(-0.90%포인트)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구조가 주요 쟁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사실상 정부 지원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미국 정부도 이를 상계관세 판단 항목으로 검토해왔다.

이재윤 철강산업연구원 “관세율 자

체는 크지 않지만 보조금 산정이 보다 엄격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232조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반면 반덤핑·상계관세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한국 업체에는 상대적인 경쟁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관세에도 한국산 수출이 이어질 경우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산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이를

50%로 인상했다. 지난 2일 발표된 포고령에서도 철강 원자재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됐다.

다만 실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약 2400만톤, 실제 생산량은 약 2000만톤 수준이며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약 40만톤으로 전체의 약 2% 수준이다. 동국제강 역시 2023년 기업분할 이전 기준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1%대에 그친다. 유안타증권은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판재류의 대미 비중이 5.8%로 강관 59.2%, 봉형강류 8.5%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metro

>> 1면 ‘스페이스X ‘잭팟’...’서 계속

정의선 회장 “진화 중심에 ‘로보틱스·피지컬 AI’”

현대차,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참여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수소’ 주목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경제 컨퍼런스에서 로보틱스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핵심 전략 시장인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등 대내외 투자 규모를 키우며 미래기술기업으로의 전환에 집중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 뉴스 플랫폼 세마포가 개최한 행사로,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주요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각국의 민관 글로벌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제 컨퍼런스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회장과 장재훈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콘래드 호텔에서 열리는 ‘2026 세마포 월드 이코노미’ 행사에 참석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부회장, 성 김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와의 인터뷰에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는 현대차그룹이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더욱 진화하는 과정의 중심”이라며 “첨단 AI로 구동되는 협업 로봇과 인간을 연결함으로써 이를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가 글로벌 청정 에너지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비전의 핵심 축으로 수소 에너지도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 공장에서의 하이브리드 제품 생산 확대,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생산 기지 구축 등을 거론하며 “글로벌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대차그룹은 유연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경쟁은 혁신을 자극하는 요소이며 현대차그룹은 경쟁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새만금 지역 혁신성장거점 투자 프로젝트에도 정의선 회장이 강조한 ‘로봇·AI·에너지 설루션 중심 미래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지역 34만 평 부지에 약 9조 원을 투자해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AI 데이터 센터, 1GW(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 미래 신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세마포 컨퍼런스 무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양성운 기자 ysw@



metro

밸류에이션 부담 잔존 보수적 투자 접근 필요

이러한 실적 개선 신호는 주주환원 확대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셋증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4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안타증권의 우도형 연구원은 “올해 주주환원율은 4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합병 자사주 소각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이 나온 이후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셋증권은 최근 자사주 소각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주주 가치 제고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스페이스X 평가이익 등으로 단기 실적이 급증했지만, 지속성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투자 의견 ‘보유’ 또는 ‘중립’을 유지하며 숏스र्ट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